

# 국힘 “당헌·당규 정비 새 비대위”...권성동 거취 추후 논의

## 법원, 비대위 효력 정지 신청 인용 5시간 마라톤 긴급의총 후 결의문

국민의힘이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한 대안으로 해석된다.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은 일단 수용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모양새는 피하는 동시에, 당헌당규를 개정해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 정지 추가 가처분 신청을 통한 제동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비대위’를 다시 꾸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오후 4시부터 5시간 동안 마라톤으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결의했다 박형수·양금희 원내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 후 공개한 결의문에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현재 당 상황이 중대한 비상사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조속한 안정을 위해 4가지 사안을 결의했다”면서 “초유의 사태로 인한 당헌당규 입법 미비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결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비대위 구성으로 인해 최고위가 해산됨에 따라 과거 최고위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 비대위를 결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는 취하되, 이의신청 및 항고 등 이의 절차를 밟아나갈 것”은 계획을 재확인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이 전 대표가 비대위 체제를 유

지하면 다시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래서 새로운 비대위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비대위 구성이 가능한 요건에 대해 ‘최고위원 절반 이상 사퇴’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사퇴’ 등 구체적인 조항을 넣을 계획이다. 또 ‘새 비대위가 꾸려지면 위원장을 누가 선임할지’ 등 현재 당헌당규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부분도 함께 손보기로 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주 초 의총을 소집해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당헌당규 개정 전까지는 현재 비대위 체제가 유지되며, 당내 최고의결기구도 현재 있는 비대위라고 설명했다.

당헌당규 개정 후 새 비대위를 세울 경우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특별히 바꿀 만한 이유가 없어보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새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책임론’이 제기된 권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수습한 뒤 의총을 재소집해 의원들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주비대위원장 직위가 정지된 상황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상임전국위 소집·개최 등 역할을 맡을 당 사령탑이 필요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추후 의총에서 원내대표직 유지 또는 사퇴를 둘러싸고 또 한 차례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지난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초과되더라도(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 등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으나,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조건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당 대표가 권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국민의힘 측은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 세번째)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삼성동 총리공관에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당정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

### “수해 소상공인에 400만원” 성수품값 지난해 수준 관리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추석 전 주요 물품의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고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추석 연휴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연휴 전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 등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성동 총리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박정호 당 수석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추석 물가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23만여 명의 성수품 공급과 650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 지원 등 전방위 조치를 통해 배추·사과·계란·고등어 등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할인쿠폰의 경우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20~30%의 할인율로 1인당 최대 4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또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추석 이후 중단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폭우에 따른 수해 피해와 관련하여 이미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10개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이날 31일까지 합동조사를 통해 추가로 선포하기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외 별도 국비를 확보해 주택 침수피해 지원에 준하는 최대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에는 작년과 달리 다중이용시설·사적 모임 등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연휴 기간 국민들이 신속한 검사·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3000개소 이상의 ‘원스톱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의료상담센터도 평소 대비 80% 이상인 14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강기정 광주시장 핵심공약 수소 트램 사업 제동 걸렸다

### 시의회 상임위 용역비 전액 삭감 “시민 의견 묻지 않아 공론화 필요”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의 핵심 공약인 수소 트램 설치(본보 2022년 8월 25일자 1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의회가 트램 설치 사업을 위한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2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5일 광주시 군공항교통국의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수립 연구 용역비’ 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를 전인 24일 수소 트램 설치 관련 용역 예산을 심의하면서 ‘시민 의견을 묻지 않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요지로 삭감할 뜻을 밝혔다.

이어진 계수 조정과정에서도 전액 삭감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으나 일부 의원이 제시한 ‘족자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 산회했다. 앞서 광주시는 2020년 8월 3억 4000만 원을 들여 발주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연

구 용역에 수소 트램 설치 타당성 연구를 위해 1억원을 증액했다. 이 용역은 지난해 6월 정부의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확정되자 중단됐다.

광주시는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수소 트램 타당성 연구까지 포함해 용역을 재개할 계획이었다.

강 시장의 공약 사업인 수소 트램은 광주 기아첸 피어스필드 야구장부터 종합버스터미널, 농성역까지 2.6km 구간이며 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시는 예결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부할시킬 수 있도록 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대통령실, 추석 전 비서관급 증폭 교체 검토

### 시민사회·정무라인부터 재정비 대통령실이 추석 전 비서관급 참모진에 대한 증폭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고한 ‘수시 개편’의 일환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다음 달 추석 연휴 전에 비서관들이 상당수 물갈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시민사회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주요 개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시민사회수석실은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A 비서관을 오는 29일 열리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아울러 인사 개입 등의 혐의를 받은 B 비서관을 스스로 물러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수석실도 소속 비서관 3명 중 최소 1명 이상을 교체 대상으로 올려놓고, 물밑에서 후임자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무수석실에서는 지난주 2급 선임행정관과 행정관 등 3명이 권고사직에 의해 물러난 일도 있었다. 전체 인원의 30% 가량을 갈라낸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전후해 선임행정관 이하 전 직원들에게 써내도록 한 업무기술서를 토대로 사직을 권고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 회사 사정상, 매매

1. 대인동 156평, 신안동 176평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평당 1300만원씩

문의. 010-3605-5000

## 투자하실분, 덕남동 임야

- 임야 2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도로접함, 개발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400만원(조정가)

문의. 010-3605-5000